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

2026. 11. 5.(목) 1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CONTENTS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

1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6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6

■ 한눈에 보는 기본사회 7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운영 12

별첨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17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 19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21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22

5.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명서 24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

추진개요

일시/장소 2026. 11. 5.(목) 16:15 / 전남청사 4층 회의실

참석대상 13명

- (의회 12명) 의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 행정소방위원장, 농수산위원장·부위원장, 시청·교육청 예결 특위위원장, 기본사회 상설특위위원장·부위원장, 원내대표, 대변인 등
-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기본사회부위원장

* 배석: (의 회)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대외협력TF팀장
(특별시) 기본사회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강남훈 (57년생)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 現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 前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 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주요내용 중앙정부 기본사회 관련 동향, 특별시의회 기본사회특위 활동,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환담 등

시간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15		• 간담회 시작	
16:15~16:18	3'	• 내빈소개	사회: 교육특위 팀장
16:18~16:20	2'	• 기념촬영	
16:20~16:25	5‘	• 인사말씀	의장님, 강남훈 부위원장님
16:25~16:40	15'	• 중앙정부 기본사회관련 동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6:40~16:55	15'	• 기본사회 상설특위 활동 등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위위원장
16:55~17:05	10'	• 주요현안 환담	
17:05~18:10	65'	• 만 찬	낙향(식당)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특별시의회 방문 간담회

1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6
- 한눈에 보는 기본사회 7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립 근거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 2026. 1. 27.

위원회 성격 대통령 소속 위원회
- 위원장: 대통령
- 부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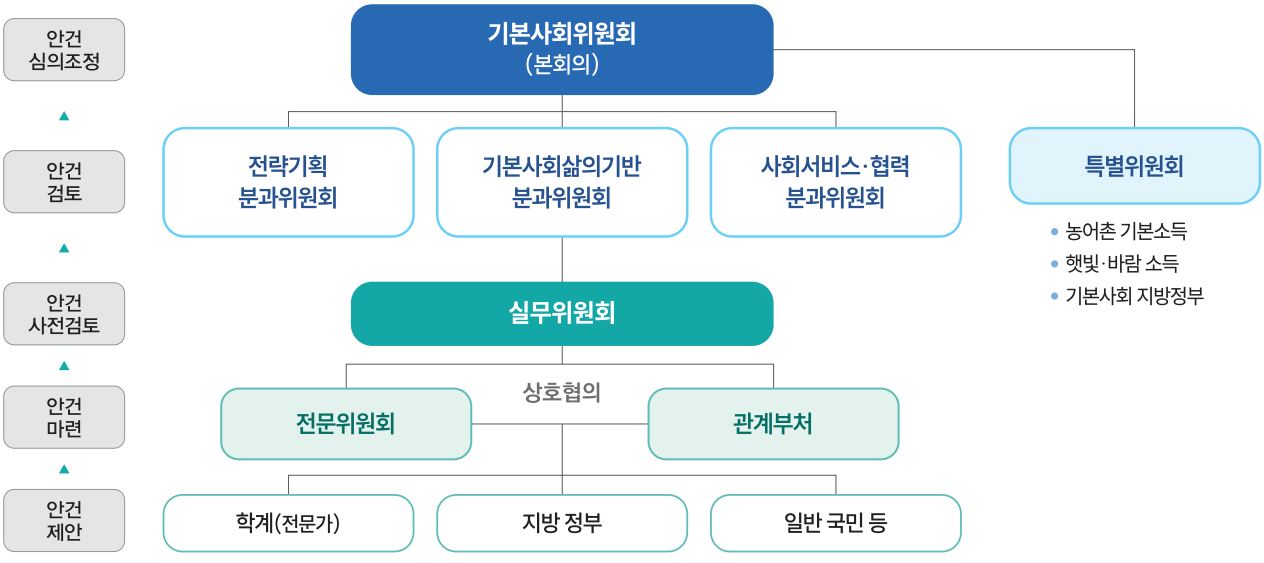
기본사회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조정

위원회 구성 위원 총 43명 이내
- 당연직 위원: 20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협의회 대표)
- 위촉위원: 22명 이내 (전문가)
-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 1인

출범 타임라인

- 2025. 6. 4. **대통령 취임사**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 2025. 6. 19.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행안부, '기본사회 구현방안' 보고
- 2025. 9. 19. **국정과제 확정**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2026. 1. 27. **설치 근거 (대통령령) 마련**
- 2026. 4.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체계



분과위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지원
실무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 및 위원회 지원(위원장-행안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전문위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연구·검토(13개-정책기획, 소득 일자리 등)
특별위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설치

위원 **43** 명 전문위원회 **13** 개 특별위원회 **3** 개

한눈에 보는 기본사회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돌봄·교육·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 기본적인 삶 : 최저 수준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삶

⚖

헌법 제10조에 근거
모든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중앙·지방정부 + 지역사회
주민·사회연대경제가
함께 만들어 감

⬆

최소한의 삶을 넘어
기본적인 삶을 보장

복지국가에서 기본사회로

	복지국가		기본사회
근거	헌법 제34조 — 최저생활(National Minimum) 보장	▶	헌법 제10조 —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
시점	사후적 대응(위험 발생 후 구제)	▶	**사전적 사회투자**(위험 예방·역량 형성)
대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별	▶	**모든 국민**(보편성)
조건	소득·재산조사 등 기준 충족 확인	▶	**별도 조건 없음**(무조건성)
운영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	**주민·사회연대경제** 등 지역사회 참여
사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급여	▶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의 다섯 가지 기본방향

① 기본적 생애소득
생애주기별 기본 생활수준 보장
+ 지역자원·공동생산 수익의 주민 공유

② 기본서비스
노동·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등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 국민참여 확대
정책 제안·우선순위 선정, 모니터링, 주민평가단

④ 사회연대경제 연계
주민자치회·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서비스 공급

⑤ 인공지능기술 연계
신청 없이도 대상자 선제 발굴, 사각지대 최소화

※ 18대 부문 = 기본서비스 14개(소득=기본적 생애소득 포함) + 추진기반 4개(추진체계·주민참여·사회연대경제·AI기술)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

저성장 · 양극화
성장률 둔화와 소득분배 악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 구조

저출생 · 고령화
합계출산율 1.0 미만 지속
다른 나라보다 빠른 고령사회 진입

인공지능(AI) 전환
효율성 확보와 함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 제기

⇒ 사회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안전망** 필요 |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고, 두터운 사회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성장도 가능" (대통령 취임사, '25.6.4.)

그간의 추진 경과

- **'25.6.4.** 대통령 취임사 — 기본사회 전환 제시
- **'25.9.16.** 국정과제 확정 — 77번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26.1.** 기본법 2건 발의 — →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26.3.)
- **'26.1.27.** 위원회 설치규정 제정 — 대통령령
- **'26.4.14.**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 첫 전체회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역할 기본사회 관련 국가 주요정책 총괄·조정·점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 위원장(대통령) 포함 43명 이내 · 3개 분과 · 13개 전문 · 3개 특별위원회

「기본사회 기본법」(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기본적 생애소득, 기본서비스, 국민참여·사회연대경제·AI 연계

계획체계 5년 종합계획 → 부문별·시도 기본계획 → 매년 시행계획

기본사회에 대한 우려와 답

Q.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을까? (근로의욕 저하)

A. 단기 생계 유지가 아닌 **장기적 개인 성장** 지원 → 더 나은 일자리 탐색·사회 혁신과 연계

Q. 그 많은 돈은 누가 부담하나? (재정 부담)

A. **햇빛·바람 등 지역자원**과 **공동 생산활동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 현금 외 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로 **지속가능성** 확보

사례로 보는 기본사회

정부 시범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 · ’26~’27년 · 1인 월 15만원 지역화폐 · 현재 17개 군(전남광주 곡성·신안·구례·보성)

95%	71%	4.7% ↑	13.2% ↑
신청률 (30.8만 명)	사용률 (1,272억 원)	인구 반등 31.9만→33.4만 명	가맹점 증가 1.4만→1.6만 개

※ 1차 10개 군, ’26.4월 기준 · 수도권·인근 대도시에서 전입 증가, 청년층 6개월간 6% 증가, 음식점·카페·마트 등 신규 창업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소득
주민 협동조합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수익을 마을과 공유
’25년 10곳 → ’27년 1,000곳 → ’30년 2,500곳

모두의 카드 교통 · 국토부
기준 초과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이용자 **500만 명** 돌파, 1인 평균 **4만 4천 원** 환급(’26.4.)

통합돌봄 돌봄 · 복지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
’26.3.27. 전국 본사업, 신청 **2만 8천 건**(일평균 717건)

국내외 우수사례

신안군 햇빛연금
소득·에너지
발전수익 30% 주민 배당, 누적 **348억 원**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
에너지·공동체
마을 협동조합 1MW 태양광
연 **1억 원** → 행복버스·마을식당

정선군 버스 완전공영제
교통
전 군민 무료버스
이용객 **212% 증가** (’19년 대비)

세종시 이응패스
교통
월 2만 원 결제 시 최대 5만 원 이용
대중교통 이용 **13.1% 증가**

광명시 추진체계
참여·제도
공무원 학습 → 원탁토론·공모전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25.10.)

대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AI·행정데이터
행정데이터 기반 전수조사
복지 사각지대 **1,182명** 발굴·맞춤 지원

美 알래스카 영구기금
해외 · 소득
석유 수익을 기금 적립, 매년 주민 배당
소득불평등 **2번째로 양호한 주**

핀란드 하우징 퍼스트
해외 · 주거
노숙인에게 주거부터 먼저 제공
노숙인 **절반 이하로 감소** (’08→’23)

기본사회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국가비전·중장기계획 심의, 범정부 조정·점검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전달체계 설계, 가이드·도구 제공

▼ 부문별 ▼ 지역별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읍·면·동
18개 부문총괄 소관 정책 기본사회 관점 재구성 부문별 기본수준 제시	시·도 기본사회위원회 **기관총괄 → 부문총괄 → 과제소관** 방향 설정·지역 진단 권역 공동과제 발굴	시·군·구 위원회· 총괄부서 수요 진단·사업 재구조화 계획 수립·실행·환류	주민자치회·마을 현장 수요·사각지대 발굴 주민 의견수렴 현장 점검

함께하는 주체 : **주민참여**(시민추진단·공론장) · **사회연대경제**(서비스 공급) · **시·도 연구원**(현황 분석·자문)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1 현황 파악·과제 발굴
마을·읍면동·시군구 의견수렴 + 연구원 현황분석(인구·정주여건·지역자원) → **지역 맞춤 과제**

2 단계별 주민참여
계획(마을계획·정책제안) → 추진(주민자치회·사회연대경제) → 평가(주민평가단)
평일 저녁·온라인 회의, 회의록 공개 등 참여 문턱 낮추기

3 사회연대경제·AI 활용
주민조직을 서비스 전달조직으로 활용, 신청 없이도 **대상자 선제 발굴**

4 기본법 제정 대비
시·도 기본사회위원회·지원단 구성, **시·도 기본사회계획(5년)** 수립 준비

"지역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 설계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운영 12

별첨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17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 19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21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22
5.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명서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정수:** 13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1)
- **구성:** 박필순(위원장), 이은정(부위원장), 이재창, 이순화, 양순봉, 강경윤, 서영미, 김명우, 김수권, 강광석, 박재선, 박은정, 박 만 의원
- **활동기간:** 2026. 7. 22. ~ 2027. 7. 21.(1년 간)
  - 활동기간 만료 전 연장사유를 기재한 연장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조례 제11조의2 제4항)
- **위원회 성격:** 기본소득·기본서비스·재원확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복수 상임위원회 소관에 걸친 쟁점사항을 종합·조정하는 상설 특별위원회

활동목표

-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의회 차원의 종합대응체계 구축
-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력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
-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서 위상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17조 ← 대한민국 법에서 '기본사회'를 명시한 최초의 규정
-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제안 이유

-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저출생·고령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에너지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빈틈없이 작동하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추진전략, 분야별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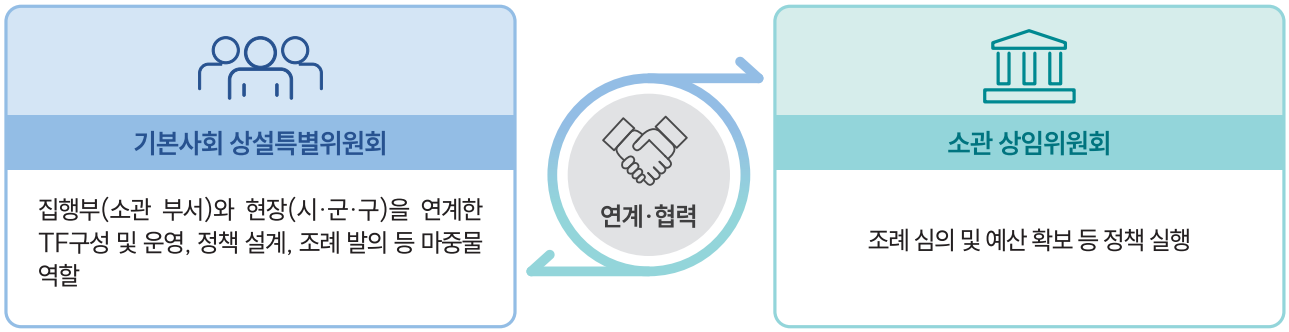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한 취임사에서 성장·균형·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을 5대 시정 운영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어 첫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대한민국 대표 기본소득 정책모델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기본사회 실현을 시정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뒷받침할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 등 지역 공유자산 기반 기본사회 정책의 선도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어, 우리 시는 국가 시범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으는 종합 대응이 필요함

- 본 사안은 기본소득·수당 등 현금성 지원(농수산·복지), 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보건·복지), 교육 지원(교육), 주거·교통(건설·도시), 에너지 기반 소득 재원(에너지·산업·경제), 대규모 재정투입(기획·예산)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걸쳐 있는 복합적이고 특별한 건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만으로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종합·조정할 의회 차원의 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이에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모든 시민에게 마땅한 권리로서 보장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대정부·국회 협력, 관련 제도·자치법규 정비의 점검과 정책대안 제시를 이끌어 내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활동계획



1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통 강화

- **인구감소·소멸위기 지역 현장 간담회**
  - 인구감소지역(16개군) 및 관심지역(동구) 등 17개 시군구 방문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청취 및 주민 참여형 토론회 개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간담회(신안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순창군)
  - 특별시 소관부서 · 기초단체 정책담당자 TF 구성 및 운영
  -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확대 방안 마련

- **지역 청년·신혼부부 현장 목소리 청취**
  - 청년 거점 공간 방문, 기본주거(공공임대), 기본금융 정책 수요 조사

- **어르신·돌봄 취약계층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초고령화 지역의 기본돌봄 및 의료 접근성 실태 점검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시민·전문가·시민사회 대상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기본사회 정책 수혜 실태 및 사각지대 관련 현장 의견수렴

2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 활동

- **기본사회 3대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국회 기본사회포럼, 지방 4대 협의체 등관련 부서·기관·단체 간 현황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기본사회 3대 분야: 기본소득·기본서비스·공유부(共有富)

- **기본사회 정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 및 쟁점별 소관 상임위 간 연계 활동**
  - 전남·광주 간 기본소득·수당 및 기본서비스 격차 실태 점검, 현금성 지원사업 통합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쟁점 사항 점검
  - 쟁점 사항별 소관 상임위 간 정보공유 및 정책대안 조정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대학 등과 MOU 체결, 정책 타당성 검토 및 입법 지원 연구 수행
  - 현재 전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 및 광주연구원 공동연구 추진

-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
  - 시민 대상 기본사회 정책 아카데미 개최, 기본사회 공감대 확산 노력

3 입법·재정적 기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기본조례」 제정**(특위 발의)
- **기본사회 관련 조례 정비**(상임위별 의원 발의)
  - 농어촌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기본돌봄, 햇빛소득 등 분야별 지원 조례의 통합·정비 과제 발굴
  - 기본사회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 검토
  - 기본사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상임위원장 간담회)
- **집행부와의 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조직 구성**
  - 종전 '전남형 기본소득위원회' ▸ '통합특별시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 집행부 기본사회 업무 전담부서 구성 촉구(기본사회담당관 신설)
-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시범사업 발굴 및 예산 심의**
  - 기본소득과 기본생활서비스 융합 모델 발굴(전남광주형 기본사회)
- **「기본사회 기본법」 촉구 등 대외협력 활동**
  -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국가 재정분담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부 건의
  - 의회와 유관기관·단체 간 정책연대를 통한 공동 제도개선 활동 전개
  - 통합특별법 상의 '기본사회 관련 특례' 점검 및 후속 입법 건의
- **특위 활동 성과 공유 및 보고**
  - 각 상임위별 활동 보고회 개최
  - 전체 의원 및 집행부, 시민 대상 '특위 활동 결과 공유회' 개최

[참고]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역할분담

구분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주요업무	• 소관 예산안·조례안 정규 심사 •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 관련 업무보고 청취 • 소관 정책대안 제시	• 기본사회 정책 전반의 추진상황 종합 점검 및 쟁점 소관별 상임위와 연계
역할분담	• 주요업무(고유권한) 수행 • 개별 소관 사항 논의 및 심사 • 특별위원회가 이관한 입법·정책과제 심사	• 기본소득·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 통합, 의료·돌봄·교육·주거 등 기본서비스 확충, 재원확보 및 기금 운용, 자치법규 정비 등 쟁점사항 종합 점검 • 쟁점별 소관 상임위 이관 및 연계 조정, 복수 상임위 간 쟁점 조율 지원 • 입법과제 발굴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이관 • 대정부·국회 건의 등 대외협력 활동 공동수행

추진일정(안)

<table>
<tr><th>월</th><th>회기</th><th>주요 의사일정</th><th>주요 업무계획</th></tr>
<tr><td>7</td><td rowspan="2">제2회 임시회
7. 13.(월)~7. 22.(수)</td><td rowspan="2">• 업무보고
• 특위 구성안 의결</td><td>• 특위 1차 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특위 소통방 개설</td></tr>
<tr><td>8</td><td>• 특위 운영계획(안) 수립
• 기본사회 정책현안 자료 수집</td></tr>
<tr><td>9</td><td>제3회 제1차 정례회
9. 8.(화)~9. 18.(금)</td><td>• 시 조직개편안 등 처리
• 25회계연도 결산 승인
•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td><td rowspan="2">• 특위 운영계획(안) 확정
• 기본사회 정책 추진상황 점검
•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 특위 2차 회의 및 현장 방문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특례 분석
• 10월 임시회 기간 중에 학습포럼
• 농어촌수당 전면실시 위한 TF 구성</td></tr>
<tr><td>10</td><td>제4회 임시회
10. 7.(수)~10. 23.(금)</td><td>• 제1회 추경안 심의
•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td></tr>
<tr><td>11</td><td rowspan="2">제5회 제2차 정례회
11. 2.(월)~12. 16.(수)</td><td rowspan="2">• 2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및 27년도 예산안 심사
•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td><td rowspan="2">• 기본사회 정책 토론회
• 대정부·대국회 건의활동
• 특위 3차 회의
• 관련 조례 정비 과제 발굴</td></tr>
<tr><td>12</td></tr>
<tr><td>1</td><td rowspan="2">제6회 임시회</td><td rowspan="2">•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td><td rowspan="2">• 기본사회 정책 소관 부서 업무보고
• 기본사회 정책 추진상황 점검
• 관련 조례 제·개정</td></tr>
<tr><td>2</td></tr>
<tr><td>3</td><td>제7회 임시회</td><td>•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td><td>•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
• 선진지 비교견학(타 시·도시의회 등)</td></tr>
<tr><td>4</td><td rowspan="2">제8회 임시회</td><td rowspan="2">• 27년도 1회추경안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td><td rowspan="2">•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지원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td></tr>
<tr><td>5</td></tr>
<tr><td>6</td><td>제9회 제1차 정례회</td><td>• 26회계연도 결산 승인</td><td>• 동결과 공유 및 보고회 개최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td></tr>
</table>

※ 상기 일정은 논의를 위한 제안(안)이며, 위원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확정 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사진	의원명	직위	소속 상임위원회 (선거구)	비고
1		**박필순** (74. 8. 16.)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광산구3)	재선 더불어민주당
2		**이은정** (70. 2. 4.)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3		**이재창** (61. 3. 29.)	위 원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나주1)	초선 더불어민주당
4		**이순화** (61. 11. 24.)	위 원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5		**양순봉** (63. 12. 20.)	위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나주3)	초선 더불어민주당
6		**강경윤** (66. 10. 12.)	위 원	안전건설위원회 (보성2)	초선 더불어민주당
7		**서영미** (68. 6. 5.)	위 원	기획재정위원회 (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8		**김명우** (69. 3. 18.)	위 원	농수산위원회 (담양2)	초선 더불어민주당
9		**김수권** (70. 3. 8.)	위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장성1)	초선 더불어민주당
10		**강광석** (70. 12. 17.)	위 원	미래산업위원회 (강진)	초선 진보당
11		**박재선** (73. 12. 17.)	위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완도1)	초선 더불어민주당
12		**박은정** (77. 12. 26.)	위 원	교육위원회 (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13		**박 만** (79. 4. 11.)	위 원	일자리경제위원회 (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 다선, 생년월일 순

[별첨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담당관실

■ 추진 여건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 출범('26.7.1.), 대도시와 전국 섬의 약 65%(2,165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 구조**

기본사회 '원조' 지역

햇빛연금·농어촌 기본소득·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선도 정책 보유

■ 추진 기반

○ **법·원칙** 통합특별법 제317조*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근거, 시정 5대 원칙**에 '기본소득' 명시('26.7.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 시정 5대 원칙(비약성장, 균형발전,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 **의회·조직** 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위 구성('26.7.), 통합특별시 내 전담조직(기본사회담당관) 신설('26.10.)

■ 기본사회담당관 주요 역할

계획·제도

기본사회 추진계획('27년) 수립 총괄, 기본사회 종합계획 연구용역 관리, 기본조례 마련, 기본사회 지역위원회 구성 등

조정·협업

실·국 부문총괄부서·27개 시·군·구 계획 조정, 기본사회 사업 성과관리, 의회 상설특위 협력 등

■ 우리시 주요 정책 현황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신안('26.2.~)·구례·보성('26.8.~) 4개 군 주민 1인 월 15~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27년 정부 확대(35개 군) 공모 대응, 정부 대상 제외 인구감소지역은 통합특별시 자체 지원 추진 검토

햇빛·바람연금

조례 제정을 통해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신안군), '21~'24년 주민 배당 누적 220억원

햇빛소득마을 누적 125개(전국 최다)

남빛 통합돌봄

소득·연령과 무관한 보편돌봄('23.4.~), 시민 77.6% 지원 대상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전국 확산

생활 기본서비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132개 섬), 舊전남 출생기본소득(월 2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연 70만원) 등

2027년 통합특별시 기본사회 추진계획(안) ※ 추후 변경 가능

목 표

압도적 성장, 모두의 기본이 되는 전남광주

▼ 3대 전략 · 14개 부문

① 함께 나누는 기본	② 고르게 누리는 기본	③ 성장 속에 지키는 기본
지역 자원 혜택을 시민과 공유	도농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성장 속에서도 일과 삶을 보호
소득, 에너지	먹거리, 돌봄, 보건의료, 교통, 주거, 교육, 통신, 문화여가	금융, 일자리, 환경, 안전
대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햇빛·바람연금	**대표 사업** 남빛 기본돌봄,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전남형 만원주택 건강버스·섬 비대면진료,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표 사업** 청년 자산형성 통장, 청년드림은행 산단·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민안전보험

추진방식 주민참여 · 사회연대경제 · AI — 별도 분야 없이 14개 부문 사업 안에 반영(행안부 가이드)

계획 구성 Ⅰ. 추진배경 → Ⅱ. 추진 체계도 → **Ⅲ. 부문별 계획 (현황·문제점 → 목표 → 추진방향 → 주요과제)** → Ⅳ. 이행점검·성과관리

건의사항

1 선도 정책의 전국 확산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월 1만원 공공임대주택 등 우리시가 먼저 시작한 정책을 정부 실현방안에 담아 전국 공통 기본서비스로 확산

- 국가 기준에 포함되면 전국 어디서나 누리는 서비스가 되고, 지방비로만 운영하던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2 정부 시범사업 우선 선정

통합특별법 제317조에 근거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 신규 시범사업 추진 시 전남광주 우선 선정

[별첨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업정책과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1차** 곡성, 신안 - 2년 (2026. 1.~2027. 12.)
  2차 구례, 보성 - 1년 6월 (2026. 7.~2027. 12.)
- 지급인원: 128,777명 (곡성 28,000, 신안 39,816, 구례 24,581, 보성 36,380)
- 지 급 액: 1인당 곡성월 15만원, 신안·보성·구례월 20만원 (자체 5만원 추가)
- 총사업비(2년간): 4,127억원 (국비 1,885 / 특별시비 1,121 / 군비 1,121)

  * 2027년 국비 지원 비율 확대: 40% → 50%/특별시·군비 30% → 25%

추진상황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신안 2025.10.20. / 곡성 2025.12.2. / 구례·보성 2026.6.11.)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작 (신안 2.27. / 곡성 3.30. / 구례·보성 8.28.)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 (장관주재 - 곡성 6. 25. / 신안 7. 5. / 구례 9. 30.)

【시범사업 추진실적】

시군	대상 인원 (명)	인구수(명)			가맹점 수(개소)		
		선정시	현재 ('26. 8월말)	증감	지급전	현재 ('26. 8월말)	증감
계	128,777	126,263	132,859	6,596 (4.8%↑)	5,107	5,804	697 (14.3%↑)
곡성	28,000	26,694 ('25.12월)	27,686	992↑ (3.7%↑)	1,069 ('26. 1월)	1,308	239↑ (22.4%↑)
신안	39,816	38,883 ('25.10월)	42,384	3,501↑ (9.0%↑)	1,151 ('26. 1월)	1,334	183↑ (15.9%↑)
구례	24,581	23,995 ('26. 6월)	24,627	632↑ (2.6%↑)	1,278 ('26. 7월)	1,386	108↑ (8.5%↑)
보성	36,380	36,691 ('26. 6월)	38,162	1,471↑ (4%↑)	1,609 ('26. 7월)	1,776	167↑ (10.4%↑)

참고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요약 (농식품부)

추진목적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지원내용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업기간: 2026~2027년(2년간) 2026년 국비 예산(추경 포함) : 304,705백만원
- 대상지역: 전남광주 | 곡성·구례·보성·신안 경기 | 연천 강원 | 정선·화천 충북 | 보은·옥천
  충남 | 청양 전북 | 진안·무주·장수·순창 경북 | 청송·영양 경남 | 남해 (8개 도, 17개 군)
  * 밑줄은 '26.6.11일 추가 선정지역(7개 군)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지급절차

신청	자격 확인	지급 대상자 결정	지급
(상시, 최초 1회 신청)	(매월 1일~20일경, 읍·면)	(매월 20일경, 읍·면위원회)	(매월 말, 군)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읍: 모든 면에서 사용, 주유소·편의점·선택택시 합산 최대 5만원* 사용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읍 하나로마트 및 면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읍 내 가맹점 및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선택택시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면 하나로마트가 지방정부와 MOU를 통해 상생활동, 사회적 기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 읍과 인접하고 인구1,200명&가맹점25개소 미만인 면의 경우 2만원 추가 가능
-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 모든 면에서 사용, 중심지 집중 업종*은 제한 없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선택택시는 합산하여 최대 5만원 사용
  * (필수5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 (최대2개) 서점, 문구점, 출산·육아용품점, 세탁소, 생활체육시설군직영

사용기한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설정

참고 2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응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 개요

- 사업기간: 2026~2027년 (2개년)
- 지원비율: '26년 국 40%, 특별시 30%, 군 30% / '27년 국 50%, 특별시 25%, 군 25%
- 지급대상: 30일 이상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
- 지원내용: 개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지급

법률제정 동향

국회 농해수위「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의결('26. 3. 11.) 후 계류중

* **시행시기:** 2028. 1. 1. **대상지역:** 농어촌 중 읍·면(제3조)
실시지역: 재정여건, 인구동향, 경제 활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선정(제7조)

추가공모 계획 (전국)

- 사업기간: 2026~2027년 (2개년)
- 지원기간: 2027. 1.~12. 1인당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사 업 량: 전국 약 18개 郡 (약 72만 명/개소당 약 4만명)
- 총 사업비: 12,960억원 (국 6,480 50%, 시·도 3,240 25%, 시·군 3,240 25%)
- 공모대상: 전국 인구감소지역 52개 郡 (전남광주 12개 郡*)

  * 담양,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 주요일정: 서류제출10. 8.~11. 3. ▶ 서류·발표 평가11. 4.~16. ▶ 최종발표 11. 19.(예정)

공모 대응계획

- 참여 희망지역 공모 지원: '26. 10월
- 농식품부 서류 및 발표평가 대응: '26. 11월

[별첨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0월 19일 진행했던 기초단체와의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요약하였음

- **군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시비 부담률 상향 건의**
  - 2026년 현재 군비 부담률은 30% 이며, 2027년에는 25%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률 상향 건의**(현 25% ⇒ 개선 30%)

- **실제 생활권 중심의 사용체계 개편**
  - 읍을 주요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면 지역의 사용범위를 읍생활권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한 결과 최근 일부 개선사항 반영

※ 농식품부 시행지침 (사용처) 개정사항 통보('26.9.29.)
- 인프라가 열악하고 자생력이 낮은 특정면*은 **5만원 사용한도 업종에서 2만원 추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必) ①읍면 동일생활권, ②읍 인접, ③1,200명&25개소 미만인 면

  - 하지만, 이 경우 "읍과 면을 생활권"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 전체가맹점+사용한도 업종(주유소,편의점,면하나로마트)을 모두 포함하여 7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 체감도 저하 및 사용 혼선 우려
  - ▶ 실제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사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이용 만족도 및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체 사용 확대**
  - 전통시장은 농촌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영세농 생계 기반, 로컬직매장으로써 중요 소비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타 가맹점과 동일하게 읍면 생활권 제한으로 면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전통시장을 전체 사용 확대하였을 시 관내 음식점 식재료 구매 비율 증가, 기본소득 업종별 매출 상위 2순위 등 내수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전통시장을 5대 업종으로 포함 건의

- **지급 대상 개념 확대**
  -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3일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5일 이상 출퇴근하며 주요 생활소비 주체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인구(공공기관 직장인 등)도 지급 대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 선정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근무하고 소비하는 생활인구도 지급대상에 포함

- **생활서비스, 사회연대경제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사회 모델 제시**
  - 마을협동조합 등 소규모 지역사회연대경제 모델 도입 필요 (예) 이동형 상점(마켓), 구독형 도시락 배달, 동네 심부름콜 등
  - 돌봄 및 의료, 교통 등 생활 서비스와 연계한 기본사회 모델 필요

- **기본소득 추가 운영비 발생 및 지급대상자 관리 행정력 소모**
  -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 이중 운영비, 현장조사 인건비, 조폐공사 수수료, 성과평가 용역, 기본소득 간담회·행사 수시 발생 등 연 8억 원 소요
  - 기본소득 통합시스템 부재(매월 행안부 주민등록자료 요청, 엑셀 수기 관리), 부정수급 현장조사 어려움 등 행정력 소모

- **물가상승 억제**
  - 저품질·가격인상 가맹점 행정지도

[별첨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건 의 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로,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다. 또한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등 농어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표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광주의 소비·교육·의료 인프라와 전남의 농·어촌 및 섬·산간지역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거 전라남도가 통합 이전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며 축적해 온 경험은 통합특별시에서 더욱 큰 정책적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전면 시행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전면 시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로 명시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의 성공은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도농 상생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선도모델로 육성하여 도농 상생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별첨5]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라!

성 명 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하려면,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이십시오.

농어촌 소멸은 국가의 문제입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국토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어촌의 역할은
모든 국민의 삶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재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반영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책은 매달 지속돼야 합니다.
그 재원을 일시적인 기금 인출과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에 기대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을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의료,
돌봄과 안전을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재정 구조가 아닙니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확대하면,
필수사업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이
지방재정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지방의 절박함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십시오.

둘째,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기존 농어업 지원과 교통·의료·돌봄·안전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성과평가와 확대 절차를 법률과
중장기 계획에 명확히 담으십시오.

우리 의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부담과 사업성과를 검증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역별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분담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지십시오.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0.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일동